

# 재정·산업·투자권한 대폭 이양...초광역 자치정부 본격화

## 전남광주특별시 무엇이 달라지나

### 국가 책임·균형발전기금 의무화로 안정성 확보 지방채·세율 자율권 확대...외투유치 파격 지원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는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행정과 경제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 특례와 산업 육성 권한, 규제 완화, 투자유치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는 초광역 자치정부로 출범한다.

#### ◇국가가 재정 책임...안정성 확보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합 이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받던 재정지원 수준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 초기 재정 불안을 차단했다.

국가사업 추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 ◇지방채·세율 자율권 확보

통합특별시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지방채 역시 조세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

어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책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은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균형발전기금 신설...지역 격차 줄인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내부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기금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생활권 연계사업, 협력사업 추진 등에 사용된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 중심의 전남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 될 전망이다.

#### ◇산업정책 권한 대폭 확대

통합특별시는 산업정책에서도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중앙정부 협의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 권한 일부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권도 확보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도 가능해진다. 창업집적 시범지구와 산학협력 선도지구 지정도 가능해져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후 광주시 수완로 힐트 베이커리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청년이 묻고 답하다'란 주제로 열린 지역청년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업 이전·투자 유치 파격 지원

특별법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도 상향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는 사증 발급과 체류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도 가능해진다. 투자환경 전반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됐다.

#### ◇노후산단 재편·에너지 전환 본격화

통합특별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 조성

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업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구조개편과 탄소중립 전환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투자금융회사 설립 가능

통합특별시는 정책펀드 운용과 전략사업 투자를 위한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요 일정

연도	내용
1966년 11월1일	광주직할시 승격 광주·전남 분리
2005년 10월17일	전남도청 무안 이전 업무 시작
2025년 12월28일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발표
12월30일	김영록 지사, 광주시에 행정통합추진협의회 구성 제안
2026년 1월2일	시·도지사, 5·18모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
1월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출범
1월8일	광주·전남 통합 소통플랫폼 개설
1월9일	시도지사·의원 청야간담회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
1월12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발족
1월15일	국회사정통합 통합 추진 공약회, 시도지사·지역 의원 간 행정통합 1차 간담회
1월16일	국무총리 행정통합 정부 지원액 발표
1월19일	시도민 순회 공청회 시작
1월21일	시도지사·의원 간 행정통합 2차 간담회
1월25일	시도지사·의원 간 행정통합 3차 간담회
1월27일	시도지사·의원 간 행정통합 4차 간담회
1월30일	민주당 당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발의
2월12일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2월23일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3월1일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립도 가능해 지역 개발사업과 신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사실상 투자기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특별법은 통합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은누리상품권 지원 확대도 가능해진다. 통합특별시는 별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

##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후보군 “이제는 실행 경쟁”

### 일제히 입장 표명...“진심으로 환영, 역사적인 날” 산업·재정·생활 인프라 등 과제...차별화 메시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행정통합이 현실화 수순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합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앞둔 책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입장에 따르면, 통합 논의를 연초부터 주도해 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In 서울’이 아니라도 충분한 삶, ‘In 광주’, ‘In 전남’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AI·에너지·로봇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320만을 넘어 400만 대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

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행안위위원으로 상임위의 결과 분회의 제안설명까지 맡아 감회가 깊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통합된 전남·광주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계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져 백년 심정”이라며 “남부권 경제수도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산하 기자

##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 구성 조직·재정·사무 통합 등 준비...시행령 제정도 추진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개 시군구 균형발전·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준비체계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행정 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광주시와 공

동으로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달부터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시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 및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6·3지방선거 출마자 출판기념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지난달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 “행정통합, 수도권 일극 넘는 대안”

신정훈 의원, 출판기념회서 통합특별시 구상 밝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상을 시·도민과 공유하는 정치적 무대로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의 필요성과 실행 방향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은 △에너지 혁신도시, 광주전남을 하나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산업지도도를 새로 그리다 △전남형 △신정훈의 승부수, 시민주권 정부 실현 등 5부로 구성됐다.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로서 40년 숙원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며 그 철학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서 ‘정준호의 대화-호남을 듣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행정통합, 광주·전남 도약 계기 될 것”

정준호 의원, 정책과제 설명...도시경쟁력 해법 공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저서 ‘정준호의 대화-호남을 듣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상과 지역 발전 비전을 공개했다.

2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열고 광주·전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안에서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과 그간의 쟁점을 소개하고, 시민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

로 통합 이후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청년·교육·생활인프라제 설계를 통해 호남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서에는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청취한 지역민의 목소리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통합특별시가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이 담겼다. 시장 현안 심층조사(FGI) 결과를 토대로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응 과제도 정리했다. 이산하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달 28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저서 ‘성장장성론’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선 8기 1350일의 균형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 “1350일 성과, 더 큰 장성 키우겠다”

김한중 장성군수, 군 성장 비전 제시...미래 로드맵 밝혀

김한중 장성군수가 28일 오후 2시 장성군민회관에서 저서 ‘성장장성론’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선 8기 1350일의 균형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1350일은 군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이 책은 성과의 기록이자 앞으로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약교토망 확충 △공공 생활권과 연계한 교육·문화 인프라 강화 △농생명·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임금 확대 △전남·광

주 상생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장성론’은 축적된 임종국 선생의 ‘물거게 정신’을 바탕으로 장성의 생애·공공 가치를 발전 철학으로 제시하고, 필요시원과 하서 김인후 등 지역 전통 자산을 산업 전략과 연결해 미래 비전을 담았다. 김 군수는 “침단 3지구와 제2산단은 일자리 기반을, 국립삼남해안연구소와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 거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